

지난해 광주시민 10만3천명 에너지 절감 실천

'탄소중립포인트제' 14억 지급 온실가스 7만8천톤 감축 효과 37만여 세대 가입 '전국 1위' 환경보호·인센티브 '일석이조'

지난해 광주시민 10만3000명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7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에너지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 10만3000여명에게 14억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제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 또는 중·소상공인이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감하거나 차량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의 특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 분야 특전(인센티브)은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 분야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광주시는 전체 65만여세대 중 56%에 달하는 37만여세대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 가입해 전국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 5만3088세대에 6억8300만원, 하반기에는 4만7762세대

에 5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분야에서는 1879명에 1억3500만원의 특전을 지급하는 등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만3000여명에게 인센티브 14억원을 지급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시민의 참여로 총 7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862만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연중 광주시 누리집이나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매년 2~4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는 지금,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 절감 실천에 동참해 환경 보호와 인센티브 혜택의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삼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시, 파리 코리아엑스포서 487만달러 수출상담

일자리재단과 광주공동관 운영 지역 기업 6개사 기술력 선보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은 지역기업 6개사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 인 파리(Korea Expo in Paris 2025)'에 참가, 광주 공동관을 운영하며 총 487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제로웰(공기정정기 등 에어가전) △센도리(공기순환기) △유니컴퍼니(열화상 카메라) △티아이피인터내셔널(두피케어기) △스위치온(조명기구) △2월의산(나전칠기 자개보석함)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기업들이 참가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광주 K-제품의 기술력

과 디자인 경쟁력을 선보였다.

특히 부대행사인 'K-Class(참가기업 제품 시연회)'에는 '티아이피인터내셔널'과 '2월의산'이 직접 제품 시연에 참여해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시장 조사 기회로 활용했다.

행사 기간 총 3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으며, 참가기업들은 향후 정식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파리 코리아 엑스포'는 한류 콘텐츠와 대한민국 제품을 결합한 복합문화형 수출전시회로, 이번 행사에는 203개 기업이 360여개 부스를 운영하며 3만2341명의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정삼아 기자

광주시, 여름철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 챙긴다

보호용품 꾸러미 600여명에 제공 대체일자리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광주광역시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여름철 안전을 위해 보호용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대체 일자리 지원을 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7월부터 지역 폐지 수집 어르신 600여명을 대상으로 차양모자, 형광토시, 쿨링물티슈, 쿨타월, 쿨파스, 벌레약,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등이 포함된 보호용품 꾸러미를 배부한다.

보호용품은 사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실용성과 활용도를 기준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형광토시를 포함해 야외 활동시 시인성을 높였다.

해당용품은 각 자치구를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안부 확인은 물론 온열질환·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여름철 대체일자리인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참여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재생활동단'은 폭염 시간대(오전 10시~오후 5시)에 폐지 수집을 중단하고 환경정화 활동이나 재활용품 선별 등 실내·그늘 아래에서 수행 가능한 대체 업무를 맡는다. 참여자에게는 월 20만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정삼아 기자

전남도, 산업단지 환경개선 국비 84억 확보

여수·나주·함평 산단 선정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3차 공모사업'에 여수·나주·함평 3개 산업단지가 선정돼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산단 거리 조성, 노후 공장 리뉴얼 등 산업단지의 근로·생활·문화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여수오천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문화 리뉴얼' 사업(국비 4억원)은 상근 인력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복지시설 개선, 공장 외관 정비, 녹지 환경 조성 등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진행된다.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국비 20억원)은 산단에 특화 거리 조성, 도로 및 주차장 정비 등 교통 환경 개선으로 추진된다. 산단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강화가 기대된다.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국비 60억원)은 근로자를 위한 휴식, 문화, 체육 기능이 복합된 공간 조성으로 청년층의 생활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이번 3차 공모를 포함해 2025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9개소 사업이 선정돼 국비 21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지현 기자



전남 가족친화문화 확산 '가족행복콘서트' 개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0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 가족친화 문화 확산 '가족행복콘서트'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나주 SRF 운영사에 2천억대 배상 우려

청정빛고을, 운영비 보전 요구 협의 결렬로 중재원 중재 신청 패소시 강제집행...배상 불가피

광주광역시가 나주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운영비 분쟁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을 배상해야 할지도 모르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광주시는 30일 SRF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운영비용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시가 2013년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목표로 추진한 SRF 제조사업의 사업자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대표사를 맡고 있다.

SRF 제조시설은 하루 16시간 운영·8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나주시 산단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구조였다.

광주시는 1톤당 5만원의 위탁처리비(기준사용료)를 주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청정빛고을은 2017년 1월2일부터 2032년 1월1일까지 15년간 운영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청정빛고을은 2016년 12월 준공됐으나 2018년 1월부터 나주시가 발전소의 사용 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신고 등을 거부하면서, 제조시설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고 이후 발전소 가동이 가능해진 2022년부터 재가동이 추진됐다.

이에 청정빛고을 측은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운영 시간 증가에 따른 비용 78억원 보전을 요구하며 광주시에 운영비 증액을 수차례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정빛고을은 2023년 2월 광주시에 중재를 요구하며 같은해 6월 광주시가 받아들여지면서 중재 심리가 시작됐다.

문제는 지난 3월, 중재 심리 도중 청정빛고을 측이 청구 금액을 기존 78억원에

서 총 2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면서 불거졌다. 청정빛고을은 △가동 중지 기간 투입된 운영비용 보전 △운영시간 증가(16시간→24시간)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 △반입 폐기물량 감소, SRF 판매 수입·철·비철금속 감소에 대한 보전 등을 증액 이유로 내걸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단심으로 진행돼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항소나 재심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 광주시가 패소할 경우 시민 혈세 수천억 원이 고스란히 배상금으로 지출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선택했으나, 포스코이앤씨 측이 신뢰를 저버리고 산정 기준을 바꿔 제시했다. 상황 변화에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를 종료하고 소송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삼아 기자

전남도, 산란계 농가 계란 안전성 집중검사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여름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8월까지 세 달간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 안전성 집중검사에 나선다.

이번 검사는 계속되는 계란값 상승으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지고, 고온다습한 여름철 닭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살충제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

려해 이뤄진 것이다.

전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 116곳에서 생산한 계란을 수거해 잔류물질과 유해균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은 살충제 34종을 포함해 항생제 등 총 81종의 잔류물질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다.

시군 담당 공무원이 농장에서 난각 번

호를 확인하고 계란 시료를 수거한 뒤, 동물위생시험소에 송부해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결과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계란은 즉시 시장에서 회수된다. 해당 농가는 6개월간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돼 계란 출하와 판매가 제한된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농가에는 2주 간격으로 연속 검사가 이뤄지며, 사육관리 실태 파악과 개선 지도도 함께 진행된다.

오지현 기자